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용인시 가과 등 3개 시 (용인시 나관 등 3개 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용인시 (가과) 등 3개 시
조치기관(부서) 용인시 (나관) 등 3개 시
내 용

1. 업무 개요

용인시 가과, 평택시 다과, 화성시 라과(이하 “용인시 등 3개 시” 라 한다)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폐기 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를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4호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 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 등 3개 시는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2024. 9. 4. ~ 9. 30.)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감사 결과, [표]와 같이 ☆☆기업 등 4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처리시설 소재지로 허가받은 부지와 접해 있는 부지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시설·장비로 허가받은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사업장 부지 일부를 벽돌 생산시설로 사용하는데도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건설폐기물 변경허가 위반내역: “생략”

그 결과 허가받은 부지 외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발생의 우려와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사업장 부지 확장 등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적은 인력에 비해 관리 대상 배출업소가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용인시장, 화성시장, 평택시장은

- 변경허가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수원시 가과 등 25개 시 (수원시 나관 등 25개 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 관리 업무 소홀 등
소관기관(부서) 수원시 (가과) 등 25개 시
조치기관(부서) 수원시 (나관) 등 25개 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시 가과, 용인시 다과, 고양시 라과, 화성시 마과, 성남시 바과, 부천시 사과, 남양주시 아과, 안산시 자과, 평택시 차과 및 카과, 안양시 타과, 시흥시 파과 및 하과, 파주시 가과, 김포시 냐과, 의정부시 다과, 양주시 라과, 광명시 마과, 하남시 바과, 군포시 샤과, 안성시 야과, 구리시 자과, 포천시 차관, 의왕시 카과, 동두천시 타과, 과천시 파과, 연천군 햐과(이하 “수원시 등 25개 시” 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이라 한다)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 관리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 기준과 방법

연번	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 설치
2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3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
4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 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

자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재구성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르면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라과, 용인시 다과, 평택시 차과 및 카과, 파주시 가과, 화성시 마과, 김포시 나과는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를 미설치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2024. 9. 4. ~ 9. 30.)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 [표 2]와 같이 ○○기업 등 2개 업체는 건설폐기물 보관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 배출자 ◎◎기업 등 3개 업체도 건설폐기물 보관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기업 등 6개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보관시설 외 보관하였고, □□기업 등 15개 업체는 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미설치 또는 부실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기업 등 2개 업체는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표 2] 건설폐기물 배출, 보관 또는 중간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내역: “생략”

그 결과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건설폐기물에 덮개 설치 등의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 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건설폐기물 업무지침”이라 한다) III.-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해설] 7.에 따르면 동일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원시 등 25개 시는 동일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이 발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수원시 등 25개 시는 별지의 [별표] “동일차량 2 이상의 처리업에 중복하여 수집·운반증 발급 내역”과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97대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받은 135개 업체로부터 수집·운반증을 중복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도록 한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폐기물 적정 보관 장소 외 장소로 운반 등 관리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3.-다.-2)에서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르면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시 카, 화성시 마과, 고양시 라과는 사업장폐기물을 적정 보관 장소 외 장소로 운반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2024. 9. 4. ~ 9. 3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이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 [표 3]과 같이 ▽▽기업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였고, ◁▷기업은 보관시설에 있는 폐기물이 보관시설 외부로 유출된 상태로 보관하였으며, ▷▷기업은 바닥 포장, 지붕과 벽면

을 갖추지 않은 보관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표 3] 사업장폐기물 기준과 방법 위반내역: “생략”

그 결과 폐기물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토록 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현장 감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인지한 6개 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일차량 2개 이상의 처리업에 수집·운반증 중복발급은 중복조회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시군구에 차량 중복 조회를 보낸 후 회신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전용차량은 처리 기한이 10일이지만 임시차량은 처리 기한이 1일로 중복조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민원인의 신청 서류만 검토하고 수집·운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전국 조회에 따른 회신이 없으면 중복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중복조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임시차량은 유효기간 6개월 이내로 신청하고 있지만 공사가 일찍 끝나는 경우 수집·운반증을 반납하지 않고 타 처리업체에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집·운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시·군으로부터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으면 올바로시스템에 수집·운반증을 첨부하여 차량 승인을 받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은 차량은 올바로시스템(업무 바로가기-업무메뉴-기초정보관리-관할업체 기초정보 조회 관리-차량조회)을 통해 조회할 수 있어 중복조회가 가능하게 시스템이 개선(2024년 7월경, 승인현황 조회 가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처리업체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최대(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모두 승인해 주고 있으나, 임시차량으로 발급받은

기간 수집·운반 내역을 올바른시스템으로 확인해 보면 짧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전용차량을 모두 사용하는데도 임시차량이 필요한지와 신청 기간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여 발급한다면 임시차량으로 발생하는 중복등록의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 용인시장, 고양시장, 화성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남양주 시장, 안산시장, 평택시장, 안양시장, 시흥시장, 파주시장, 김포시장,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광명시장, 하남시장, 군포시장, 안성시장, 구리 시장, 포천시장, 의왕시장, 동두천시장, 과천시장, 연천군수는

○ 사업장폐기물을 적정 보관 장소 외 장소로 운반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동일차량으로 2 이상의 처리업에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업체에 대하여 수집·운반증 반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복 발급된 수집·운반증 반납 등을 하시기 바라며,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의 필요성 및 유효기간을 검토 하고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수집·운반증이 중복으로 발급되지 않도록 자체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동일차량 2 이상의 처리업에 중복하여 수집·운반증 발급 내역: “생략”

일련번호	3	감사자	○○○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수원시 가과 등 13개 시 (수원시 나관 등 13개 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 등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수원시 (가과) 등 13개 시
 조치기관(부서) 수원시 (나관) 등 13개 시
 내 용

1. 업무 개요

수원시 가과, 고양시 다과, 화성시 라과, 성남시 마과, 부천시 바과, 안산시 사과, 평택시 아과, 안양시 자과, 시흥시 차과, 김포시 카과, 의정부시 타과, 광명시 파과, 양주시 하과(이하 “수원시 등 13개 시”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도지사¹⁾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 등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됨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운반 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제66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²⁾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변경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였을 경우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 등 13개 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운반 차량의 감차 등 변경 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법 처리업의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 기간(2024. 9. 4. ~ 9. 30.) 중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제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운반 차량 소유 현황’ 등 자료에 대해 서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의 [별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감차 및 허가 기준 미달 내역” 과 같이 수원시 등 13개 시에서 허가받은 ① 55개 업체의 106대 차량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감차 되어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 37개 업체가 운반 차량의 감차로 인하여 허가 기준(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허가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관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법의 취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변경 신고를 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 부서 의견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 하겠다는 의견

2)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및 건설폐기물 업체에 대한 감독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원시장, 고양시장, 화성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안산시장, 평택시장, 안양시장, 시흥시장, 김포시장, 의정부시장, 광명시장, 양주시장은

○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감차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운반 차량의 감차로 인하여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지]

[별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감차 및 허가 기준 미달 내역: “생략”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김포시 가과 등 3개 시 (김포시 나관 등 3개 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업무 등 소홀
소관기관(부서) 김포시 (가과) 등 3개 시
조치기관(부서) 김포시 (나관) 등 3개 시
내 용

1. 업무 개요

김포시 가과, 평택시 다과, 고양시 라과(이하 “김포시 등 3개 시”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집·운반업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시·도지사³⁾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 시장·군수에게 위임.

그리고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2의2에 따르면 같은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할 때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 등 3개 시는 임시보관장소 승인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2024. 9. 4. ~ 9. 30.) 건설폐기물 처리업 현장감사 결과, [표 2]와 같이 ☆☆기업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거나 승인기준 보관용적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였으며, ○○기업은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기는 승인 행위 외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선별·분리하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기업 등 2개 업체는 임시보관대상으로 승인받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였으며, ◇◇기업 등 7개 업체는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시설 외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였다.

[표 2] 임시보관장소 등 위반내역: “생략”

그 결과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등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현장감사를 통해 인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양시장, 김포시장, 평택시장은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파주시 가과 등 4개 시 (파주시 나관 등 4개 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파주시 (가과) 등 4개 시
 조치기관(부서) 파주시 (나관) 등 4개 시
 내 용

1. 업무 개요

파주시 가과, 화성시 다과, 김포시 라과, 평택시 마과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관리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⁴⁾하려는 자는 시·도지사⁵⁾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변경신고에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4) 설치신고 기준: 동일 배출구에 이중시설 설치 또는 다른 배출구에 신규 시설 설치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

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4항 제1의2호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 가과, 화성시 다과, 김포시 라과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 또는 폐쇄 등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배출시설 내역과 현장의 배출시설 내역이 다른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2024. 9. 4. ~ 9. 30.)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감사 결과, [표 1]과 같이 ☆☆기업 등 4개 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동일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파쇄시설, 분쇄시설 등)을 일부 증설 또는 폐쇄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방식을 변경하였으며, ◇◇기업은 다른 배출구에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인 선별(자력)시설 6개를 사업장에 설치신고 없이 설치·운영하였다.

[표 1] 대기배출시설 위반내역: “생략”

그 결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농도, 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처리용량 등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는 우려가 있고,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등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관리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⁶⁾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

6) 「물환경보전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2호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시 마과, 파주시 가과, 화성시 다과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소재지에 임의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2024. 9. 4. ~ 9. 30.)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장감사 결과, [표 2]와 같이 ○○기업 등 2개 업체는 순환골재 등을 생산하면서 수조에 물을 담아 폐목 등을 분리하는 새로운 배출시설을 설치신고 없이 설치하였고, ○○기업 등 4개 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다른 소재지에 세륜시설 등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표 2] 폐수배출시설 위반내역: “생략”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권한 재위임

그 결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환경보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우려가 있고,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등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현장감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인지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은 인력에 비해 관리 대상 배출업소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파주시장, 화성시장, 김포시장, 평택시장은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절차를 하시기 바라며,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화성시 가과 (화성시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방지지설의 설치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화성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화성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화성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지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에서 방지지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등 방지지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에 따르면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지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낮추기 위한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2024. 9. 4.~9. 30.)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장감사 결과, ☆☆기업에서 배출시설(선별시설)과 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을 연결하고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한 후 배출하는 것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았으나 9. 26. 현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연결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대기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방지시설 설치 등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현장감사를 통해 인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화성시장은

- 방지시설 설치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용인시 가과 등 3개 시 (용인시 나관 등 3개 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용인시 (가과) 등 3개 시

조치기관(부서) 용인시 (나관) 등 3개 시

내 용

1. 업무 개요

용인시 가과, 평택시 다과, 화성시 라과(이하 “용인시 등 3개 시” 이라 한다)는 「산지관리법」 제44조, 제52조 등에 따라 불법산지에 대한 관리·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르면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복구의무자는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에 따르면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각 호⁷⁾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 등 3개 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용인시 등 3개 시는 [그림]과 같이 ○○기업 등 3개 영업소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면서 산지전용변경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여 사용하는 등 산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2024. 9. 30., 이하 생략)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나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림] 불법전용산지 현황: “생략”

그 결과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재해 피해 발생 우려와 산림훼손 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법 제44조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등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용인시는 건설폐기물 현장감사로 해당 부지에 대한 산지 훼손을 인지하게 되어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등을 이행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평택시는 해당 사업장 부지 인수 당시 불법전용 여부 등을 확인 후 복구명령 사전통지 등 이행 예정이며 향후 불법사항 적발 시 조속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화성시는 해당 부지의 절성토 등 형질변경의 흔적은 없으나 폐기물 적치 등이 인지되어 행정 및 사법처분 등 조치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용인시장, 평택시장, 화성시장은

- 앞으로, 불법산지에 대한 관리·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 감사 결과 확인된 위 사업장들의 관계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른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김포시 가과 등 4개 시 (김포시 나관 등 4개 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김포시 (가과) 등 4개 시
 조치기관(부서) 김포시 (나관) 등 4개 시
 내 용

1. 업무 개요

김포시 가과, 파주시 다과, 평택시 라과, 화성시 마과와 바과(이하 “김포시 등 4개 시”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 제20조 등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된 건축물 등이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 각 호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

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⁹⁾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인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김포시 등 4개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김포시 등 4개 시는 [표]와 같이 ○○기업 등 11개 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허가(신고)받지 않고 사무실, 창고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2024. 9. 4. ~ 9. 30.)까지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서에 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다.

[표] 위반건축물 현황: “생략”

그 결과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해당 영업장의 근로자 사고 등의 우려가 있고 건축물의 대지·구조·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김포시는 약 9천 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하여는 인지하

9)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지 못하여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으나 현장감사 시 지적사항을 전달받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완료하였고 이후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파주시와 평택시, 화성시 바과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감사 시 지적사항 통보 이후 현장 확인 및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등을 이행하였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화성시 마과는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의 위반건축물을 신규 적발하여 시정명령 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등이 없는데도 사전에 모든 관내 필지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관내 단계적인 정비 계획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포시장, 파주시장, 평택시장, 화성시장은

- 앞으로, 위반건축물 지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 감사 결과 확인된 위 사업장들의 관계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